원내 위상·발언권 등 시너지…정체성 극복·여론이 관건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 공론화 착수

찬성론 대세속 일부 신중론
이르면 이번달내 공식 제안
정의당은 "제안 오면 검토"

민주평화당은 26일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내부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정의당도 민평당이 당론을 모아 제안하면 공식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민평당은 이날 오전 개최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받은 뒤 정의당에 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타진할지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법상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석이 필요하다. 현재 민평당 14석, 정의당 6석이어서 두 당이 합의한다면 '턱걸이'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민주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동영, 이용주 의원 등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박지원 의원 등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가적인 당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찬성 입장인 의원들은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 적폐 청산 등에 양당이 별다른 노선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공동교섭단체를 구성, 함께 힘을 모으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모두 교섭단체 지위를 얻지 못해 원내 운영은 물론 정국과 관련한 발언권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분명히 내면서 당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양당에서 나오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이날 회의 보고에서 "주요 입법과정이나 예산안 등을 논의할 때 교섭단체만 협상에 참여하는 만큼 (민평당과 정의당은)상임위원회 배분, 국회 발언권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의정활동의 긍정적 효과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동교섭단체의 명칭을 '민주와 정의의 모임'이나 '정의와 민주의 모임'으로 예시하기도 했다. 2008년 정체성이 다른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전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정체성이 다른 정의당과의 인위적인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과연 민심이 동의할 것인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2인 1각의 공동교섭단체 활동이 오히려 정치적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의당 페이스에 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평당 내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찬성파들은 "정의당과 정체성이 같은 부분은 같은 대로, 다른 부분은 다른 대로 정책협약서를 체결하면 정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일부 반대 입장을 피력한 의원들도 조만간 동의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평당은 이달 중 당내 의견이 공동교섭단체 추진으로 모이면 정의당에 이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정의당은 민평당이 단일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닌 만큼 민평당의 공식제안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판단 유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국회 내 위상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정체성이 다른 민평당과 손잡을 경우 당내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평화당 박지원(맨 왼쪽)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전주로 대구로…바른미래당 존재감 알리기 안간힘

안보는 한국당, 개헌은 민주당과 공동 보조

바른미래당이 지지율 하락 위기를 맞자 원내 제 3당으로서 존재감을 각인시키는데 주력하고 나섰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당의 노선을 비롯해 신당의 가치를 분명히 알리기로 했다.

우선은 사안별로 뚜렷한 목소리를 내며 중도 성향의 국민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26일 "당의 출범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겹치는 바람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민생과 정체성을 내세워 다시 한번 출발하는 자세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오는 27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언론사의 정치부 부장단과 오찬을 하기로 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19일에는 신당 출범 후 첫 현장 최고위 회의를 전북 전주에서 열어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책을 논의했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이 같은 현장 행보는 제20대 총선 당시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과, 영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탈당파가 합쳐 탄생한 바른미래당이 창당 정신에 맞게 민생을 챙기는 것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도 바른미래당은 안보에서는 보수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중도층의 안보 불안감을 대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전날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에 대한 반발로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그러나 개헌에서는 개헌투표와 6월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를 지지하면서 여권과 발을 맞추고 있다. 지난 22일 의원총회의 결론은 비록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이었지만 지방선거 후 10월 개헌을 요구하는 한국당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야당이지만 기존 진영 논리를 벗어나 여권에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사안에 따라 협조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정협의에 응원법…정치권 '미투' 앞다퉈 지원

민주 젠더폭력대책 TF 여성단체 간담회 의견 청취
바른미래·민평당, 공소시효 연장 등 법안 마련 나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위드유(WITH YOU, 미투 운동 지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성단체 및 정부와 각각 간담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모색했고, 야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성폭력 근절 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태스크포스(TF)는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피해자들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피해사례를 영역별로 구분해 상담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TF는 같은 당 김상희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미투,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성희롱·성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여성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범정부 대책단 구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운동 응원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7개 법률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은 이 법안은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연장·정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투 운동과 관련해 8개의 관련 법률의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강한 '위드유' 연대를 하겠다"며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민평당 법안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법률상 처벌 한도를 상향하고, 피해자의 말할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민평당은 아울러 성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의 징계 기준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갑질 성폭력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또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에 대해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